

향후 23년간 1인당 연평균 33만원 꼴

'비전 2030' 국민부담은? 복지분야에 예산 집중 국제·조세? 재원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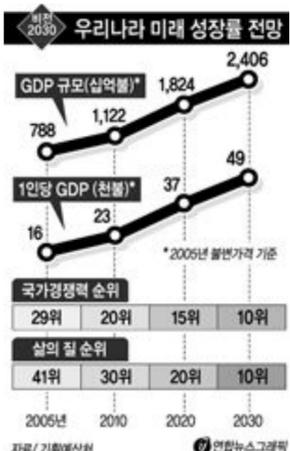
정부가 30일 발표한 '비전 2030'을 실현하는 데는 향후 24년간 1천100조원이 필요하다. 이 부담액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뒤 인구수로 나누면 연간 평균 1인당 부담액은 33만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날 제시하지 않았다. 증세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원 얼마나 필요한가=정부는 '비전 2030' 실현을 위해서 2007~201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1%, 2011~2030년에는 GDP의 2.1%가 더 필요하며 액수로는 2007~2010년 4조원, 2011~2020년 1천96조원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7~2010년에 4.9%, 2011~2020년에 4.3%, 2021~2030년 2.8%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전제로 깔고 있다. 그러나 1인당 국민부담은 1천100조원을 인구수인 4천850만명으로 단순히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1천100조원은 물가상승분을 제거하지 않은 경상기준 액수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계산방식대로라면 국민 전체부담은 25년간 모두 400조원, 연간 평균 16조원이며 이를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연간 33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1천100조원은 조세로 부담할 경우의 금액이다. 만약 국제에 충당한다면 이까지 감안해야하므로 실제 액수는 1천600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어떤 분야에 투입되나=재정은 경제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정부세종청사 별관에서 열린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구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국가경쟁력 순위	29위	20위	15위	10위
삶의 질 순위	41위	30위	20위	10위

국 57.2%(2004년), 이탈리아 49.3%(2003년)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제재정의 비중은 올해 19.9%에서 2030년에는 10%로 떨어진다. 분야별로 사회복지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노인수발보충제도, 주택바우처제도 등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보육·노인·장애에 지원 등 사회서비스 확충 ▲대공적연금의 재정안정과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등 사회보험 개혁에 자금이 투입된다. ◇국제인기, 조세인기=국제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재정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현재의 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겠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국가채무는 이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상당히 부담스럽다. 국가채무는 작년말 248조원에서 올해말에는 280조원으로 증가하고 내년말에는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제이자지급액이 올해는 11조원, 내년에는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재원을 모두 조세로 충당하는 것도 어렵다. 납세자들이 섣

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조세부담이 무거워져 외국자본 유치경쟁에서 밀리면 세수도 줄어들다. 따라서 국제과 조세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증세 논란=전문가들은 중장기적 비전에 대한 공론화를 받으면서도 재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야당도 증세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2010년까지는 증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차기정권에 부담을 넘기는 것이고 다음 정권도 이후 정권으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계획이 대규모 증세를 수반하는 또 다른 '세금폭탄'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번 계획에 붙은 슬로건은 '희망한국'이 아니라 '세금폭탄 선언서'나 다름없다"며 "이번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현재의 20대와 30대는 죽었다고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산고 끝에 탄생한 '비전 2030' 전문가 60여명 참여 '첫 국가 미래 장기 전략'

기획예산처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들도 20~30년의 장기비전을 갖고 있는데 세계 경제 10위국인 한국에 중장기적 청사진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 작년 6월 비전 수립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에는 전문가 60여명으로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민간작업단이 발족했다. 작업단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연구원·산업연구원(KIET)

등의 전문가, 서울대·연세대 등 대학교수와 삼성경제연구소·한국국제교류재단 등 민간전문가 등이 작업단에 참여했다. 작업단은 지금까지 60여차례의 토론회를 가졌고 5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작업단은 선진국의 개념은 무엇인지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민하고 토론했다. 작업단은 아울러 외국의 비전에 대한 실사 조사를 벌여 선진국들은 지식·혁신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지위 이동성을 높이

는 문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브라질·인도·러시아·중국 등은 사회인프라 확충, 정치·경제제도 개선, 성장동력 다변화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기획처는 이런 작업 끝에 지난 5월에 이 비전을 발표하려 했으나 재정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뒤로 미뤘다가 지난 29일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번에는 충분한 사전 협의없었다는 여당의 반대

주요간 열린우리당과 사전협의의 했으나 여권 내에서는 내년 대통령선거에 부담된다는 반대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처는 이 중장기비전을 최종적으로 선택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논의와 고민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한국 최초의 중장기비전 보고서가 세상에 나오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돌 맞은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재외동포·韓商 연구 토대 구축

700만 동포 네트워크·석·박사 과정 개설 학술적 정립 기여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원 세계한상문화연구원(단장 임재완 사회과학대학장, 정치외교학과)이 30일 개원 3주년을 맞았다.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과제로 채택돼 지난 3년간 27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연구단은 재외동포와 세계 한상(韓商)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단은 재외 동포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40여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조사를 해 700만 동포를 네트워크해 왔다. 또 정보기술(IT), 산업, 교육, 비정부기구(NGO), 언론, 인권, 여성 등 한민족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단은 지난 3년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국제학술회의 20여 회, 국내 학술회의 10여 회, 특강 10여 회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제1차년도 단행본 총서 11권을 발간하는 등 각종 학술활동을 통해 재외동포

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증대시켜왔다. 특히 대학원에 '세계한민족네트워크학술과정'이라는 석·박사 과정을 설치해 현재 20여 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으며, 대학 교양과목인 '세계한민족의 이해'를 설강해 재외동포 문제를 학문적으로 정리해 내고 있다. 또 3년 동안 수집한 자료를 DB화해 웹사이트(www.hansang.or.kr)를 구축하고, 재외동포 각 분야 개인, 단체 디렉토리, 현황조사 콘텐츠, 통계자료, 사진자료 등으로 분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단은 앞으로 'globalization and diaspora'라는 국제규모의 학술지를 연 2회 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2007년 중앙아시아 한인 강제이주 70주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임재완 단장은 "앞으로 재외동포를 연구한 석사, 박사가 탄생할 것"이라며 "전남대가 재외동포 연구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태기자 hwangtae@kwangju.co.kr

김정일 방중설 갈수록 무성

정부, "아직 정황증거 없어"...가능성은 열어 놔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설과 관련, 아직까지 김 위원장의 방북을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 핵심현실이 나오고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만큼 김 위원장이 북한에 가서 흥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 때문에 방중설이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열차로 중국을 방문하려면 단둥(丹東)이나 신의주에 북한 보안요원들이 있어야 하고, 며칠 전에 선발대가 중국에 도착해 협의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며칠 전에도 그런 첩보가 있어 확인에 들어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방중시 중국에 비밀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도 우리에게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방중 하루 전

에야 탐지를 했다"면서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추적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다른 정부소식통도 "중국은행(BOC)의 북한계좌 동결 등과 같은 문제가 있어 김 위원장이 중국에 갈 필요성은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설은 최근 또 다시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특별영사가 중국에 도착했으며 이를 위상으로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돌더니 아예 '이미 김 위원장이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뒤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첩보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방중설이 '갑작스럽게' 부상한 것은 최근 북중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추론은 '김 위원장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전격적으로 중국방문을 결정했고 이를 중국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어떤 형식이 됐든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사일 발사 이후 포일 대로 포인북핵 6자회담은 물론 동아시아 정세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서경빌딩 임대

● 면적: 120평 - 150평
● 층수: 5층 - 10층
● 위치: 서경빌딩 (서경대, 서경대병원, 서경대병원) 인근

● 임대료: 월 100만원 - 150만원
● 계약기간: 1년 - 3년

● 문의: 010-9900-1234

면적이 넓어진다! 민족이 높아진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 서경빌딩

● 면적: 120평 - 150평
● 층수: 5층 - 10층
● 위치: 서경빌딩 (서경대, 서경대병원, 서경대병원) 인근

● 임대료: 월 100만원 - 150만원
● 계약기간: 1년 - 3년

● 문의: 010-9900-1234